

보신탕 먹는 ‘복날 풍속도’ 뒀안길… 완전 종식 난항

7일부터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사육·판매업소 광주 30·전남 96곳
3년 유예기간 후 영업 종료해야
손실액 보상규모 정부와 큰 이견
잔여견 50만마리 처리방안 고심

과거 개고기를 먹으며 보양했던 ‘복날 풍속도’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질 채비를 마쳤지만, 완전한 개 식용 종식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7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개 식용이 금지됐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는 지적이다.

50만 마리로 추산되는 전국 개 사육농장의 식용견 처리 문제와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을 위한 정부의 폐업 지원금이 업계 측이 주장하는 금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 사육 농장과 개고기 판매업소는 광주시 30개소(개 사육 농장 9곳·개고기 유통업 7곳·개고기 판매 업소14곳), 전남도 231개소(개 사육 농장 135곳·개고기 판매 업소 96곳)다.

이날 기준 전남도에서만 4만2000여마리의 개가 식용을 위해 길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소들은 ‘개 식용 금지법’ 공포 후 유예기간 3년이 지난 2027년 2월 7일 이전에 운영을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개 식용 금지가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인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방안을 두고 양측이 내세우는 보상금 액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그간 육견협회에선 개 한 마리당 1년 수익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손실액인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가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육견 업계 실태조사’에서 추산한 개 한 마리당 순수익 31만원보다 9만원 높은 금액이다.

특히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한 만큼 업계의 주장인 5년 치 손실액이 아닌 3년 치의 손실액을 보상한다면 개 한 마리당 지원금은 93만원으로 업계 요구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자체는 유예기간 동안 조기 운영 종료하는 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개 식용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진영 전남도 축산정책과 동물복지팀장은 “아직 농식품부에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아 정해진 지원금은 없다”며 “현재 업계와 농식품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음달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공식 발표할 기본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 식용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며 실제로 개고기 소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 염소탕, 삼계탕 등 대체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자연스럽게 개고기 문화가 사라져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개 식용 금지법 유예기간 동안 조기종식을 위해 빠르게 폐업한 업주에게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안과 잔여견 처리 방침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개 식용 관련 업소 5625곳의 50여만마리의 개에 대한 처리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의 수용률이 포화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50만마리의 잔여견을 동물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잔여견들이 도살·안락사 등에 처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대응 방안 마련이 주목된다.

전남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유예기간과 그 이후에 남아 있을 잔여견에 대한 처리 대책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며 “보호센터 관리·입양 등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지만 이미 동물보호소들은 잔여견들을 수용할 만큼의 여력이 안 되고 식용을 위해 길러지는 개들은 크기가 큰 대형견들이 많아 입양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이어 “9월에 농식품부가 발표할 기본계획에 잔여견 관리·처리 해법이 포함될 것”이라며 “금액에 대한 부분은 농식품부와 기재부 간의 협의가 이뤄진 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항이라 올 연말쯤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접수된 ‘폐업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통해 전·폐업 지원액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다음달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담긴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폭주족 뿌리 뽑는다”… 광주·전남 특별 단속

내일부터 이틀간 집중 순찰
교통경찰·기동대 등 동원

경찰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광주·전남 전역에서 오토바이(이륜차) 난폭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광주경찰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부터 광복절 당일인 15일까지 교통경찰, 교통범죄수사팀, 기동대 등 경력 170여명을 동원해 시 전역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심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난폭·폭주 이륜차 예상 집결지 등지에서 가시적 경찰 활동을 펼쳐 교통 안전 확보에 나서며 음주 운전단속도 병행한다.

전남경찰과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도 광복절에 맞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 타나는 이륜차 폭주 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폭주 등 불법행위 근절·예방, 단속·수사 등을 아우르는 집중 단속 계획을 시행함과 동시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사전 홍보·계도 예방에 집중한다. 또 112신고 등을 통해 파악한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에서 집중 순찰·단속 활동을 한다.

전남경찰은 전남에서 이륜차 난폭운전 건수가 지난해 3건에서 올해 5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 단속 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기동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앞서 올해 현충일 순천시 도심 일대에서 이륜차 폭주를 벌인 일당 17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광주·전남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이륜차의 전조등·소음기·조향장치를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각종 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꾸준히 단속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방림동 공사장서 크레인 고리 떨어져 시민 1명 경상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연결고리가 떨어져 다치고 놀란 시민들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남구 방림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여m 높이에 설치된 철제 연결고리가 지상으로 추락해 주변 도로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 A(53·

여)씨는 철제 연결고리 추락으로 튕 파편이 왼쪽 어깨에 맞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B씨와 C씨는 과호흡 증상을 호소해 당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남구는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연결고리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찬 기자

광주 도심서 80대 운전자 세차장 돌진… “페달 오인”

광주 도심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세차장으로 돌진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

13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21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도로에서 A(83)씨가 몰던 SUV차량이 건물 담장과 세차장을 차레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건물 외벽과 차량 범퍼 등이 손상됐고 A씨와 동승자 B(78)씨가 경

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세차장은 영업 중이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인명피해가 없는 단독사고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전기차 충전 캠페인 전기차동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광주 북구청 효죽 주차타워에서 구청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직원들이 전기차의 충전상태와 충전시설 이용시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경찰,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면허 정지·취소 등 1만1900명
음주운전·사망사고·무면허 제외

광주경찰은 15일 “2024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13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4년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23년 12월31일) 직후인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다. 해당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만1907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되며,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1만 90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1명

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합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8월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938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 역시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4년 6월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9월19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 확인이 불가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4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5일 자정 이후부터 가능하다.

김은지 기자